

“새만금 신항만 대폭 늘려야”

김종희 의원, “화물부두 2~3만t에서 5만t·크루즈부두 8만t에서 15만t 이상으로 확대를”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 김종희 의원은 29일 해양수산부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부두시설은 현재 화물의 경우 2~3만톤 규모, 크루즈 선박의 경우 8만

톤급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화물부두의 규모는 2~3만톤에서 5만톤급 이상, 크루즈 부두는 8만톤에서 15만톤 이상으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 근거로 새만금이 동북아의 물류와 첨단산업기지로 조성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새만금은 점차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성장엔진에 물동량을 ‘동네항만’ 수준으로 낮춰 잡아서 안된다는 논리다.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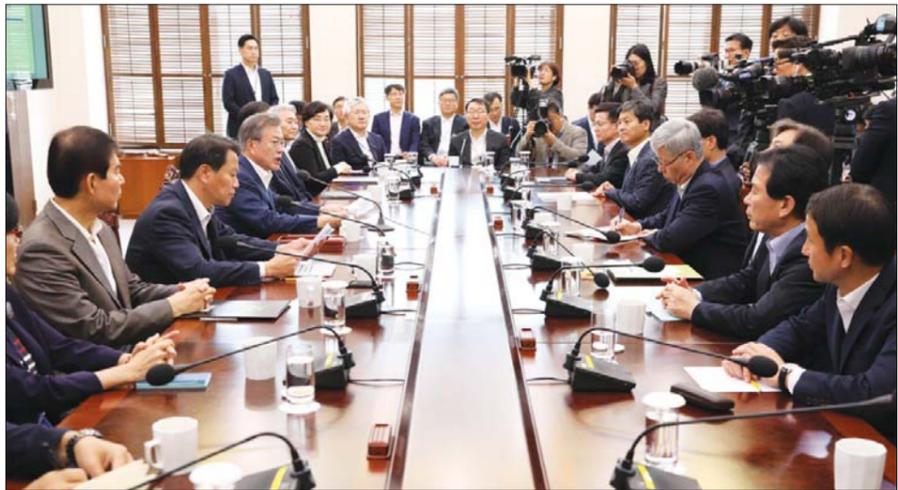
년 착공 이후 지금까지 4조5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국가의 명을 걸고 앞으로도 새만금에 20조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1조6156억원(2단계 공사비, 1단계 포함 경우 2조5593억원)인 새만금항은 현재 국비 45%, 민간자본 55%로 계획돼 있다”며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 당초 민간자본 유치 전략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 직접 개발방식’으로 방향을 튼 사실을 거론했다.

새만금 개발을 직접 책임질 기관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12일 출범한다고 해수부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발이 크면 큰 신발을 신는 게 이치”라며 해수부와 기재부 차원의 통 큰 투자를 재차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 돌봄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

홍 수석·보좌관 회의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폐업 내지는 원아모집 중단 등 사립유치원이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지원되는 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보육과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

집 확충,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며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관계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추어서 사립 유치원 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민주·국민·정의당 지역위 고형권 작가 초청강연회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승)는 오는 11월 3일 오후 4시 당원들과 시민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순창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성 전투를 소재로 한 역사소설 ‘남원성’의 저자 고형권 작가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역사소설 남원성은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를 소재로 한 것으로 1597년 남원성에서 민군(民軍)에 사실상 패배한 것은 6만의 왜군으로 5일 동안 싸워 승리를 이루어낸 조선 민중들의 이야기로, 고 작가는 남원성 전투는 조선 민중의 빛나는 승리라고 이 소설의 이야기를 풀어 간다.

이 전장에서 남원성을 지키던 민관군 일만은 왜군에게 함락되고 무참히 살육 당했으며, 당시 전사자들의 코가 소금에 절여져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으로 가게 된 상황을 역사소설로 복원한 것이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역사에서 저평가된 남원성 의병들의 싸움을 복원했다.

한편 박희승 위원장은 “비록 남원성 전투는 부분적으로 패배했지만, 왜군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입혀 정유재란을 일으킨 일본군이 퇴각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호남인들의 남원성 전투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백남기 손해배상’ 3년 만에 종결

지난 2015년 11월 사고... 유족들 ‘국가책임’ 손배소

국가 4억9000만·경찰 6000만원 배상... 총 50억5000만원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국가와 경찰로부터 총 5억5000만원 배상을 받게 됐다. 사고 발생 3년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장 기동본부 4기동단장과 당시 살수요원 2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유족 4명에게 총 6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다음해 9월25일 숨을 거뒀다.

앞서 유족들은 2016년 3월 “경찰이 살수차 내부 규정을 위반해 머리에 직사 살수했다”며 국가와 경찰 등 7

명을 상대로 2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씨 사망 이후에는 청구액을 7억여원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유족들에게 4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고, 국가와 일부 경찰이 권고안에 합의하면서 확정됐다.

하지만 신 전 단장과 살수요원 2명은 이의신청을 내 재판을 이어갔고, 6000만원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여 이번 소송을 종결짓게 됐다.

한편 신 전 단장은 관련 형사 재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살수요원 2명에겐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구 전 청장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임대주택 부자 10명 가진 것들만 4622채”

서울이 3583채 보유 가장 많아... 부산·경기 순

‘임대주택 부자’ 상위 10명이 가진 임대주택만 총 4,622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사진)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68세로, 총 604채를 보유했다.

서울 마포구 거주 40세(544채) △광주 서구 거주 67세(531채) △서울 강서구 거주 47세(521채) △경기 용인시 거주 46세(452채) △전북 전주시 거주 40세(424채) △충북 충주시 거주 79세(401채) △경남 창원시 거주 51세(396채) △서울 강남구 거주 45세(385채) △충남 천안시 거주 52세(364채)가 뒤를 이었다.

‘임대주택 부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서울로, 상위 10명이 3,583채를 보유했다. 다음으로는 △부산 2,372채 △경기 2,339채 △광주 1,917채 △충남 1,783채 순이었다.

상위 10명이 가진 임대주택 수가 가

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총 547채였다. △경북 643채 △울산 665채 △대구 685채로,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최연소 임대사업자’ 상위 10명 중 5명은 서울 거주자였다. 가장 어린 임대사업자는 인천 남동구, 경기 성남시에 사는 2세 아가다.

서울 ‘최연소 임대사업자’ 상위 10명 중 9명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거주하는 4~6세 유아다. 나머지 한 명은 종로구 거주 6세로, 임대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임대사업자 혜택을 노린 돈 있는 사람 ‧ 집 많은 사람들이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듯 부동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국토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안일해져서는 안 된다”며,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청년의 꿈이 농업에서 새롭게 피어납니다

꿈을 꾸는 청년들이 농촌으로 모입니다
청년들의 꿈과 함께 농업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농촌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피어나도록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지부장 이문식

**고창농업협동조합
해리농업협동조합**

**선운산농업협동조합
흥덕농업협동조합**

**대성농업협동조합
고창부안축협**